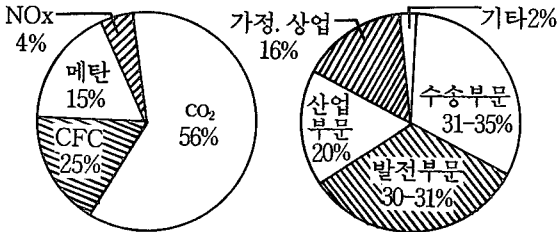


미국, 온실효과 조항이 완화될 전망

연내 미의회통과가 예상되는 대기정화법(Clean Air Act) 개정안중 온실효과(Global Warming or Greenhouse Effect)조항이 예상보다 완화된 형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 그 이유는 1) 온실효과와 메카니즘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안되어있고, 2) 정책실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크기때문이다. 경제성장과 온실효과 해결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 하나의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. 따라서 미국은 단기적으로 온실효과에 대한 연구, 개발을 병행하면서 규제강화보다는 에너지절약에 치중할 것으로 생각된다.

온실효과 원인물질은 CO₂, NO_x, CFC, 메탄으로서 이중 CO₂가 주된 원인물질로 밝혀졌다. CO₂배출의 30%는 발전부문에서, 35%는 수송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수송, 발전부문의 CO₂감소가 온실효과 해결의 관건이 되고 있다.

온실효과에 대한 원인물질 및 부문별 기여도



자료 : ICR, '89. 7. 28. ER, '90. 1. 22.

부시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대기정화법 개정안에서 온실효과 대책비용으로 연간 96억불을 산정했다. 그러나 상. 하원 및 산업계가 계산한 비용은 부시행정부의 비용보다 훨씬크게 나타나고 있다.

(표 참조). 특히 업계측은 이러한 법의 실시에 따라 산업생산감소, 실업증가, 정유시설, 재투자, 폐광등의 부작용이 초래될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.

분석단체	대책비용(년간)
부시행정부	\$96억
하 원	\$173억
EPRI ¹	\$326억
BRT ²	\$240억

자료 : ER, '89. 12~'90. 1월 각호

주 : 1)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

2) Business Round Table

반면 환경론자들은 부시의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. 그들은 현재의 에너지 소비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 대기온도가 2°C상승, 지구의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과학자들은 온실효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,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. 이와 관련, 부시행정부는 '91회계년도에 온실효과 연구. 개발에 산을 전년대비 60%인상된 \$10억을 반영했다.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한 부시대통령은 취임당시의 규제강화에서 후퇴,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균형있게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처해있다. 따라서 직접적인 규제(벌과금 부과, 세금징수)보다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제도에 역점을 둘 것 같다.

대안으로는 에너지절약, 원전활성화, 신. 재생에너지 개발등이 제시되고 있다. 이중 에너지절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(10~15년)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.*

(에너지동향 제공)